

삼성비자금등 온갖 비리 우익과 개혁사기꾼의 아귀다툼 신자유주의 · 파병 정책

이제는 끝내야 한다

투쟁을 확대하라 권영길을 지지하라



‘삼성공화국’
이건희의 범죄와 비리

16면

민주노동당과 2007 대선

3~5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투쟁

홍예버 승선화 조합원 동행 취재

10면

아일랜드 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 인터뷰

14면



특집 : 러시아 혁명 90주년

8~9면

왜 이라크 파병 연장
저지가 중요한가

6면

비상사태에 맞선
파키스탄 민중 저항

7면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의 연대

—삼우정밀의 모범에서 배운다

11면

www.counterfire.or.kr

〈맛불〉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맛불〉 온라인 기사

시련에 처한
유럽의 급진좌파 정당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영국 리스펙트를
비롯한 유럽의 급진좌파 정당들의 위기
의 원인을 설명한다.

소말리아 선박 납치의 뿌리
마부노화는 돌아왔지만 제국주의적 개
입이 계속되는 한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서평
정하준은 신자유주의의 신화를 속사원
하게 폭로·논박하고 있지만 몇가지 약
점도 보여 준다.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불법적으로 돈으로 로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정표가 담긴 작은 선물을 하라는 얘기”

－ ‘이건희 지시사항’에 대한 삼성그룹 한 임원의 독특한 해석

“이회창 총재를 정통 보수 세력의 대부로 모신다. … 테러나 암살 위험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 우리 쪽 후보가 혼자면 암살하면 끝이지만 둘이면 그만큼 암살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 극우익인 국민행동본부장 서정갑

한나라당 안상수: “[다른 당들도 국감 피감기관에게 항응을 받았는데] 왜 한나라당만 마치 ‘못된 정당’인 것처럼 비난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중심당 심대평: “그러나 한 나라당은 다르지 않나? 자기들끼리 가기 그러니까 우리당 의원 보고 가자고 한 게 아니었나.”

－ 난형난제

“그대여/ 힘이 생겼다고/ 좋아서 날 뿔 것 없네/ 그대도 /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할 때가 있었음을 / 생각하게나”

－ 박근혜 측의 표적인 된 이재오가 홈페이지에 올린 자작시 ‘가을 산행’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이라크 파병 연장을] 지지한다면 [파병 연장 반대도] 다시 판단해 보겠다.”

－ ‘놈현스러운’ 정동영

“자이툰 부대나 동의 부대,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등의 파병에 국제적 목적이 있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고 해서 찬성을 했었다.”

－ 역시 ‘놈현스러운’ 문국현

“시민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시험을 계속할 것”

－ 출근길 시민을 태운 채 위험천만한 무인운전 시험을 한 서울도시철도공사

구속노동자를 모두 석방하라

21세기 한국 노동자의 현주소 – 죽거나 혹은 갇히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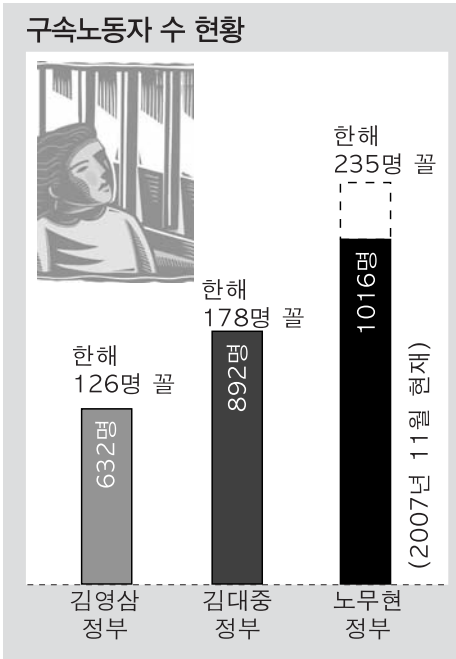
이광열(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분노와 눈물로 흠뻑 젖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건설노동자 정해진 열사를 포함해 노무현 정권 들어 살해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열사는 27명(추모연대 집계), 구속당한 노동자는 1천16명이다(구속노동자후원회 집계).

구속노동자 수가 1천 명을 넘어선 것은 노태우 정권 이후 처음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사실상 ‘법외 노조’ 시절과 닮은 탄압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유명을 달리한 노동열사나 구속노동자들은 대부분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린 비정규직이나, 해고 노동자들이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전체 노동자의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임금과 노동조건뿐 아니라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는 기본권조차 차별받고 있다.

‘민주개혁 세력’의 탈을 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기업주들에게 무한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 피땀 흘려 쟁취한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정치적·시민적 권리들을 꺾고 빼가듯 빼갔다.

검사와 판사들은 파업 노동자들을 구속할 때 “업무 방해”, “폭력” 등의 누명을 뒤집어 씌운다. “노동탄압 국가”라는 비난을 피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을 ‘흉악범’으로 몰기 위한 교활한 수법이다.

하지만 구속된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포항건설노조,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화물연대, 텀프연대, 뉴코아·이랜드 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는 일터에서 직업병에 시달리며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도 가족들의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노동조합은 노예 상태를 벗어나 ‘인간답게 살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보루였다.

사실상 구속노동자 재판은 ‘자본 독재’에 항거하는 노동자들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 재판’이다. 정몽구, 김승연 같은 파벌치범들은 관대하게 용서해 주는 법원은 기업주들이 터무니없이 부풀려 청구한 ‘손해배상’에 근거해 파업노동자들의 재산과 임금까지 가압류하고 있다. 또, 행정명령에 불과한 ‘가처분’ 결정만으로 쟁의행위나 집회·시위를 마음대로 탄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공세와 더불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탄압 속에서 구속노동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치단결된 투쟁이 필요하다.

고려대 당국의 출교무효판결 불복

고려대 당국은 항소를 취하하고 출교생들을 당장 복교시켜라

법원이 “출교는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출교무효판결을 내렸지만 고려대 당국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결정했다.

고려대 당국은 출교 조처가 “신중한 교육적 판단”이고 “법리적 판단에 의해 훼손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되레 법원이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과 질서를 지키라며 법원으로 가자고 하더니, 이제 와서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고려대 당국이야말로 “성찰”해야 한다.

고려대 당국은 “반성을 표명하고 학업에 충실할 것을 약속하면 징계를 재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지만, 출교학생들은 어떠한 공식 입장도 전달받은 바 없다. 최근 학생처장이 학생회장들과 면담에서 “반성하면 퇴학”이라고 말한 것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고려대 당국은 출교생들에게 반성을 운운하기 전에 출교의 발단이 된 지난해 본관 시위의 배경을 돌아 봐야 한다. 법원도 인정했듯이 보건대 학생 차별 반대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고려대 당국이다.

손씨검

수없는 대화 요구를 “할 이야기 없다는 게 대화야! 법원 가서 이야기해!” 하고 쏘아붙이며 완전히 무시하고, 출교 학생과 부모님 들을 손씨검한 고려대 당국이야말로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번 항소 결정은 고려대학교 재단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재단은 2005년 삼성 이견희에게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에 반대해 시위를 벌인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끔찍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삼성 비자금 폭로 파문이 일고 있는 요즘, 삼성에 맞선 투쟁의 포문을 연 고려대 학생들의 당시 행동이 얼마나 용기있고 올바른 것이었는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 학생들을 강의실로 돌려보내고, 비자금 비리와 부패의 주범인 이견희의 철학박사 학위를 회수하는 것이 진정 고려대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다.

고려대 당국은 항소 결정으로 출교생들의 신념과 자신감을 꺾으려 하지만 출교생들은 강의실로 당당히 돌아가는 순간까지 온힘을 다해 싸울 것을 결의했다. 출교생들은 겨울철 천막농성을 위한 준비를 갖추며 투지를 다지고 있다.

출교생들에게 훨씬 더 광범한 지지와 연대가 필요한 때다.

강영만(고려대 출교생)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 주점

일시: 2007년 11월 16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학생식당
주최: 출교반대대책위
후원계좌: 하나은행
391-910195-67507(예금주 강영만)

국가보안법의 수호자 이명박

최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대선 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이명박은 “민감한 문제”라며 서면 답변을 거부했다.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권경석은 국민연대와 면담에서 “국가안전보장법으로 개정하자는 게 이명박 후보의 입장”이며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상호주

의적으로 개폐돼야 한다”고 답했다.

불고지죄 정도만 삭제하고 보안법의 핵심 조항을 그대로 놔두자는 것이다. 또한, “대북 관련, 대테러, 대산업스파이 측면으로 [공안]기구를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의 반동적 색채를 분명히 했다. 국민연대는 11월 8일 이명박 캠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정동영은 ‘국가보안법 폐지’ 답변을 보내왔지만,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겠다’더니 뒤통수만 친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인 그의 말을 고스란히 믿어서는 안 된다.

문국현도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동시에 “북미수교를 활용해야 한다”는 북미수교 연계론을 펼쳤다.

말과 행동 모두에서 일관되게 국가보안법에 반대해 온 권영길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한편, 검찰은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교육을 빌미로 활동가들을 조사하고 있고, 부산교육청은 관련 교사들을 중징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또 노무현 정부는 지난 6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3보1배를 하던 국가보안법 수배자 3명과 국민연대 황순원 상황실장을 연행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한 국가보안법의 이중잣대에 맞서 폐지 투쟁에 불을 지펴야 한다.

조승희

권영길 후보의 정책과 공약들

세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의 요구들

유일한 반신자유주의 · 반전 후보이자 친노동자 · 친환경 후보

장호중

대선 후보 등록일이 가까워 오면서 각 당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박은 “사교육 폭증 · 입시지옥 강화 · 민중압사” 교육 정책에서 보이듯 5퍼센트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법인세 인하 등은 기업주만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 할 만하다. 이명박은 한나라당 안에서도 비판받는 황당 무계한 공약인 ‘경부운하’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정동영의 공약은 역겨운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차별 확대 정책으로 우리의 행복을 파괴해 온 정부의 계승자가 ‘차별 없는 성장’과 ‘가족 행복’을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변치르른 겉치레를 걷고 정동영의 공약을 살펴보면, 결국 한미 FTA 찬성, 비정규직 악법 고수, 법인세 감면, 주택 공급 활성화 등 친기업 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찾아낼 수 있다.

반신자유주의

반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이들 과 근본에서 다른 공약들을 내놓았다.

우선 “경제 성장을 공약 다름”에서 벗어나 “서민소득 증가 7퍼센트, 불평등 감소 9퍼센트”를 경제 목표로 삼았다. “권영길의 서민친구(7·9)경제”는 “개발독재 경제, 신자유주의 경제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입시, 학벌, 사교육비라는 한국 교육의 3적(敵)”을 제거하는 대학평준화, 학벌 ·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무상교육, 학생 인권 보장 등 급진적인 교육 공약은 입시 지옥에 시달려 온 학생들과 학부모 · 교사들에게 신선한 대안으로 비칠 것이다.

1가구1주택 법제화, 택지국유화, 공공 임대주택 확대, 분양원가 공개, 전월세 상한제, 종부세 · 보유세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주택 공약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몇 안 되는 부자들의 재산 증식을 위해 내 집 마련 꿈을 버려야 하는 1천6백만 서민, 지하 · 쪽방 · 비닐방에서 겨우 살아가는 1백60만 서민들의 한을 말끔히 풀어” 주겠다고 했다.

권영길 후보는 재앙적인 기후 변화를 막고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대안도 내놓았다. 온실 가스 배출을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에너지전환2020’이 그것이다. 빈곤층 무상 에너지 공급, 정유사의 폭리 근절 방안 등 권영길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적이면서도 친노동자적이다.

권영길 후보가 제시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비정규직 확대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다. 물론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저하로 이어져선 안 된다.

그래서 권영길 후보는 정부와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 지원금”을 내놓으라고 제시했다.

권영길 후보는 1백대 기업과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주들이 정규직 전환 기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를 확

대해 당장 ‘비정규직 4백만 명을 정규직화’하자고 주장한다.

비정규직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부자들의 보험료 누진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무엇보다 권영길 후보는 정책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지난 10월 31일에 파업 전야의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 이렇게 투쟁을 독려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작업 현장에 화장실을 달라는 것이다. 비가 와도 밥을 먹을 수 있게 식당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0개월 근로계약서 만들어서 맘대로 해고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서울에 1백만 명이 모여 시위를 벌이자.”

부유세와 양극화세

물론 권영길 후보의 이런 진보적 공약들을 실현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과 정동영 등은 재정 계획도 없이 거짓 공약을 남발하지만, 권영길 후보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부자와 재벌들에게 부유세 · 양극화세를 걷자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들의 공간은 미어터지는 반면 서민들의 삶은 힘겨워지고만 있는”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다.

부유세가 신설되면 당장 이명박은 8억 2천3백만 원, 정동영은 4백50만 원, 문국현은 2억 6천4백만 원을 내야 한다.

부유세와 양극화세를 도입하고, 탈세

와 부정을 저질러 얻은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만으로도 54조 원을 거둘 수 있다. 이 정도면 당장 무상의료 ·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기초연금을 지금의 3배로 늘리는 데 부족함이 없다.

다만 연 2천만 원 이상 소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복지세는 부적절해 보인다. 한 달에 2백만 원도 못 버는 노동자에게 사회복지세를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 서민의 빈곤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들과 정부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주, 대기업 임원, 부동산 · 주식 투기꾼,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서 높은 누진세를 거둬야 한다. 부가가치세 · 유류세 · 교통세 등 간접세는 낮추거나 없애고 법인세 · 상속세 · 양도세 · 보유세 같은 직접세를 대폭 인상하는 게 옳다.

권영길 후보의 급진적 공약을 실현하려면, 공약 실현에 필요한 비용을 부자 · 재벌들에게 받아내려면, 권영길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강력하고 거대한 대중투쟁의 힘이 필요하다.

권영길 후보는 지난 몇 주 동안 범국민행동의날 조직위원장을 자처하며 전국의 노동자 · 농민을 만나 투쟁을 독려했다. 선관위의 탄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다.

이제 범국민행동의날로 결집한 힘을 더욱 확대 · 발전시키며 한미FTA 저지 · 비정규직 철폐 · 파병 연장 저지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런 요구와 투쟁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

주간 <맞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www.counterfire.or.kr / reader@counterfire.or.kr / 전화 : 02-2271-2395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대선 국면 정치세력들의 동향과 민주노동당

김인식(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중구위원회 위원장)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라

‘백악이 무효’인 대통합민주신당



대통합민주신당의 상황은 ‘백악이 무효’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 배신과 그로 말미암은 대중의 불신과 환멸 탓에 대통합민주신당은 뭇 해도 안 되는 상황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 정동영이 그나마 살아남으려면 노무현 정부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 인기 없는 정부와 선을 그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동영이 최근에 파병 재연장 반대 입장 표명 등 ‘좌측 깜빡이등’을 켜는 까닭이다. 그러나 정동영은 열우당 지도부 시절에 파병 찬성 당론을 주도한 바 있고 지금도 여론이 파병 찬성으로 기울면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민을 수 없는 자다.

또, 당내 입지가 취약해 내심 노무현의 지지를 얻고 싶어한다. 그런 만큼 노무현과 차별성 갖기도 일관되지 못하다.

대통합민주신당이 그나마 겹고 있는 유일한 ‘희망’은 범여권 후보단일화인 듯하다. 한나라당 집권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 말고는 범여권으로서의 달리 기댈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보단일화를 향한 과정도 험난하겠지만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단일화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명박의 독주는 범여권의 분열 때문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와 여권)의 무능과 실정 때문이다. 그러나 범여권이 ‘헤쳐 모여’ 한다고 해서 대중의 불신이 해소될 리 없다.

범여권 성향 교수들 27명으로 구성된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 27’은 후보단일화 대상에 민주노동당까지 포함했다. 민주노동당한테 대선에 독자 출마하지 말라고 요구한 셈이다. 민주노동당이 독자 출마하면 “진보개혁” 성향의 표를 분산해 이명박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이면에 깔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도운 것은 노무현 정부와 여권이다. 지난 5년 동안 노무현 정부와 여권은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정책을 펴 왔다 –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지지, 한미FTA 추진과 비정규직 확대 등 신자유주의 ‘개혁’, 국가보안법 존속 등. 이런 노무현 정부의 ‘반개혁’ 정책들이 2004년 탄핵 후폭풍으로 코너에 몰렸던 한나라당을 소생시켰다.

또, 민주노동당이라는 선택이 없다면 그 표가 모두 범여권으로 갈 것이라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다. 진보적 대안이 없다면 역겨운 개혁사기꾼들에게 투표하기보다 아예 투표에 불참할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

한편, 일부 진보진영 인사들은 민주노동당 강화와 한나라당 집권 저지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 때문에 달레마를 겪는 듯하다. 전자를 강조하면 후자의 목표를, 후자를 강조하면 전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민주노동당 후보가 출마하더라도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당선 가능한 비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4 남북 공동선언 이후 이런 주장이 부쩍 늘고 있는 듯하다.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는 아예 “반한나라당 3자연대”를 주장했다. “계급적 관점에서 본다면 개혁세력은 민노당과 재야 세력 뿐”이지만 “수구반동으로의 회귀 저지”라는 “역사적 소명”을 위해 (연립정부를 전제로) ‘권영길-문국현-정동영’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상 2007년판 ‘비판적 지지’인 셈이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한나라당이 정권 탈환을 향해 내달릴 수 있도록 길을 닦아 준 것은 노무현과 범여권이다. 그러므로 진보진영은 한나라당과 범여권 모두에 반대해야 한다.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한나라당

반노무현 정서의 오른쪽 수혜자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앞날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지지자 3명 중 1명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이명박 지지자들 중 이명박의 도덕성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 지지를 바꿀 것이라는 사람이 45.1퍼센트다.

최근 잦은 이명박의 실수들이 결정적 사건과 만난다면 그의 지지율이 급강할 수 있다는 뜻이다. 5년 전 이회창이 아들 병역 비리로 결정타를 맞았듯이, BBK 비리 등이 이명박을 고꾸라뜨릴 수도 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한나라당도 불안해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유력 후보 유고시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려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회창 출마 논란이야말로 한나라당 일각의 불안감을 보여 주는 분명한 사례다. 이명박이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 자신들을 홀대했다는 일부 보수층의 불신(특히, 대북 문제에서)과 불안(이명박의 비



권영길 후보, “한나라당과 범여권의 노동자 죽이기 동맹에 맞서 이제 대반격을 시작합니다”

리 문제로 인한)이 이회창의 출마를 자극했다. 이회창이 12월 19일까지 완주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정치 상황이 몹시 유동적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일부 사람들은 이명박의 높은 지지율이 “국민의식의 보수화 현상”에서 비롯한다고 본다. 이것은 일면적 인식이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적 신자유주의 공세 중 하나인 비정규직 확산은 커다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 투쟁은 높은 대중적 공감을 얻고 있다.

한미FTA도 노무현 정부 임기 내에 국회에서 비준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주류 정당의 대선 후보들도 이 문제가 선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반전 여론도 견제하다. 여론의 다수가 한국군 철수를 요구한다. 그래서 노무현은 생중계 방송을 통해 파병 재연장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야 했다.

요컨대, 노무현 정부의 위기는 두 가지 상반된 그림을 만들어 냈다 – 사회 상층부의 ‘수구화’ 경향 재촉과 아래로부터의 혼란스러운 급진화. 이명박은 전자의 발전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 양극화가 첨예하게 진행될 때에는 정치적 휘발성도 강해진다. 이런 시기에는 대중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수시로 등장했다 사라질 수 있다. 이명박의 승리를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볼 수 없는 까닭이다.

범여권의 문턱을 오락가락하는 문국현

문국현이 범여권의 지리멸렬 속에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 주류 정치의 위기를 틈타 제3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는 현상이다. 사람들이 서로 다를 바 없는 정동영과 이명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을 거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국현은 진보의 핵심 잣대라고 할 수 있는 한미FTA·파병·국가보안법·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범여권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모호하다.

- “WTO 하에서 FTA는 당연한 순리”
- “정투병만 아니라면 [한국군 해외 파병도 괜찮다]”
- “[국가보안법]은 북미수교라는 빅뱅으로 … 통 크게 해결될 수 있을 것”
- 비정규직 법안의 개정을 주장하나 포항건설노조와 하중근 열사에 대해 “포스코가 직접 고용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진정성이 의심된다.

또, 그는 1백37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다. 문국현이 거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진정한 문제는, “서민처럼 보이지” 않겠다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가 자신의 자본가적 계급 배경을 고수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는 민주노동당이 “약자를 배려하는 건 좋으나 기업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문국현 전 사장의 시대정신은 기업가의 시대정신일 뿐”(권영길 선대위)이다.

종합해 보건대, 문국현은 민주노동당이

지난 6월 중앙위에서 결정한 바 있는 진보대연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국현의 ‘가치’와 민주노동당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문국현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온정주의’라 할 수 있다. 그에게 노동자와 피억압자는 온전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일 뿐이다. 그가 지금까지 노동자와 피억압자의 운동에 대해 아무 말 없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피억압자의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 일각에서는 문국현의 지지층이 당의 지지층과 겹친다는 점 때문에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것 같다. 권영길 후보가 문국현에게 만남을 제안한 것도 이런 고민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해서 두 당이 ‘가치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미국 노동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민주당을 찍는다고 해서 미국의 진보진영이 미국 제국주의의 양대 정당 중 하나인 민주당과 ‘가치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듯이 말이다.

왜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가?

민주노동당을 둘러싼 객관적 환경이 민주노동당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양당 구도에 심각한 균열이 생겨났다. 또, 주요 사회 의제들(파병, 비정규직, 한미FTA 등)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당 지지율을 크게 상회하는 대중적 공감을 얻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대중 정서가 민주노동당 지지로 충분히 모이고 있지 못하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 권영길 후보의 지지를 정제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상당수 개혁 염원 대중의 눈에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가망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점이 핵심 원인이다. 부분적으로는 10·4 남북 공동선언의 효과도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그로기 상태에 있던 노무현의 지지율이 반짝 올라갔다.

권영길 후보의 ‘범국민행동의날’ 조직을 위한 ‘만인보’는 이를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대중 행동을 건설하며 반신자유주의와 반전 쟁점을 최대한 부각해서 대선 국면에서 주류 정치권에 도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밖 좌파단체들 중 다수는 문성현 당 대표가 한국노총 지도부에 사과한 것을 문제삼아 민주노동당



진보의 가치를 대변하는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노동자들

지지를 거부하는 것 같다.(당 일각에서는 대선 운동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합리화하는 구실이 된 것 같다)

문 대표의 사과논는 분명 잘못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단순히 기권할 것인가? 이번 대선에서 진보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 정당은 명백히 민주노동당이다.

또, 선거는 계급 투쟁이 벌어지는 결정적 장소는 아니지만 계급 투쟁을 반영한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계급 이익의 충돌이 선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국의 몇 백만 선진 노동자와 피억압 대중이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노동자와 피억압 대중에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 서라도 민주노동당 후보에 투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대선에서 획득한 표는 주류 정당들에 대한 좌파적 반대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시위하는 효과를 낼 것이고, 다음에 운동을 건설할 때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차떼기’의 귀환을 둘러싼 우익들의 아귀다툼

이명박의 위기와 ‘차떼기’의 귀환

‘차떼기’ 이회창의 귀환이 이명박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조선일보>의 한 논설위원은 이명박을 “고위험 ‘서브프라임’”에 비유한 바 있는데, 결국 오물과 부실 범박인 이명박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촉발된 것이다.

국정감사를 거처며 추악한 실체가 더 분명히 드러난 ‘BBK 게이트’는 김경준의 귀국이 확정되면서 ‘연쇄 폭발’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의 말처럼 “땅 투기로 집값 올려서 서민들 몰리고, 조세 포탈로 복지 빼앗고, 주가 조작으로 경제 질서 어지럽힌” 이명박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재앙”일 뿐이다.

이런 끊이지 않는 부패·비리 의혹 때문에 이명박 지지층의 45.7퍼센트가 이명박을 ‘불안한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다(<한겨레> 11월 5일지). 이런 불안 덕분에 이회창 ‘스페어’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일부 좌대망상적 우익들은 이명박 암살 위험을 들먹이지만, 부패와 비리로 인한 이명박 ‘유고’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다.

그러나 이회창을 부패한 이명박의 대안으로 세우려는 것은 불쾌한 코미디다. 이회창은 1997년 대선 때 국제청을 동원해 1백66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조성해 이른바 ‘세풍’이란 신조어를 만든 자이다. 2002년 대선 때는 두 아들의 병역 비리와 기업들로부터 8백23억 원을 ‘차떼기’로 긁어 모은 것이 들론다. 불법·탈법의 대명사다.

이들의 대권 경쟁은 노회찬 의원의 말처럼 “도덕불감 의혹광”과 “차떼기 부패광” 간의 아귀다툼에 불과하다.

우익들은 이명박과 이회창의 분열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호기를 놓칠까 봐 두려워 한다. 그러나 우익의 분열은 이미 시작됐다. 이명박 측은 제 얼굴에 침뱉 듯이 ‘차떼기’까지 들먹이며 이회창을 공격했다.

이회창은 이명박이 “수구꼴통으로 물릴까 봐 말조심”해 왔으며, 이명박의 정제성에 대한 전통적 우익들의 의심을 자극하고 있다. 극우인 국민행동본부장 서정갑은 “이명박 후보[가] … 햇볕정책 승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다가 ‘신좌파 정권’ 들어서서 것 아니냐”며 이회창이 “정통보수세력의 대부”라고 말한다.

이런 이견투구식 폭로전은 우익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최근 떠오른 삼성 불법 비자금 문제도 ‘삼성 가족’이나 다름없는 이회창과 이명박에게 또 다른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익의 위기가 범여권에게 기회를 줄 것 같진 않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떼기’ 이회창의 귀환 이후 정동영은 지지를 3위로 추락했다. 한나라당의 위기에서 반사이익을 얻기에는 범여권과 개혁사기꾼들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증오가 워낙 뿌리깊다.

민주노동당은 올바르게도 우익들의 부패·비리 문제뿐 아니라 삼성 비자금 문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하며 기성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권력자들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이채롭 모아내고 행동으로 조직한다면 민주노동당 선거 도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명호

파병은 한국 민중의 삶도 망친다

노무현 정부는 ‘국익’을 내세우며 파병을 연장하려 한다. 그러나 파병 연장은 노동자와 민중의 이익과 어긋난다.

자이툰은 이라크 재건을 돕고 있지 않다

자이툰은 이른바 ‘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이툰 예산 중 거의 90퍼센트가 자이툰 자체 무장과 쿠르드족자치정부의 민병대와 정보 요원들을 훈련시키는 데 쓰인다.

쿠르드 민병대와 정보 요원들은 미군을 도와 저항세력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면서 종파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자이툰은 이라크 점령과 저항세력 탄압 집단을 돕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이 테러의 표적이 됐다

자이툰이 미군과 부역 세력을 도우면서 한국인들은 테러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을 되돌아 보라.

더구나, 현직 대통령과 지지율 1위 대선 후보가 노골적으로 석유를 위해 자이툰 파병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간 큰 부시도 감히 하지 못한 말이다. 이라크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2004년 4월 스페인 마드리드, 2005년 7월 영국 런던의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테러가 서울에서 재연될 지도 모른다.

파병은 돈 낭비다

지금까지 자이툰 파병 비용으로 쓴 돈이 7천억 원을 넘는다. 파병이 연장된다면 추가비용 4백46억 원이 필요하다. 서울 시내 노숙자 수는 파악된 것만 5천여



자이툰이 지원하는 이라크 점령이 살인적 고유가의 원인이다

이라크 점령은 고유가를 낳았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2003년 하반기 이후 만성적인 고유가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이란 확전 논란이 불거지면서는 배럴당 1백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삶이 더 팍팍하게 됐다.

한국에서도 이미 서민들이 사용하는 난방용 면세 경유 가격이 2년 만에 리터당 3백 원에서 7백 원으로 급등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연탄으로 난방을 바꾸고 있다. 반면 국내 5대 정유사들은 역대 최고 이윤을 기록하고 있다.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 주둔 미군을 돕고 이란 확전 가능성이 더 커질수록 석유값도 더 오를 것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이라크 점령을 계속 지원하려면 대중의 요구를 무시하고 불만을 억눌러야 한다. 민주적 권리 침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점령 참가 정부들은 이주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분류하고 마녀사냥했

데 미국은 9.11 이후 무려 1백60만 명을 체포하고 23만 명을 구금했다.

한국에서는 최근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될 조짐이다. 노무현은 지난 9월 21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테러방지법 추진 과정에서 국정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이 테러 대상이 된 것은 한국 정부가 제국주의 점령에 동참해서다.

테러방지법은 이런 테러 위협 증가는 막지 못하면서 시민적·정치적 권리 억압만 강화할 것이다. 영국은 ‘테러 선전 간행물’ 보급을 금지하는 새로운 대테러법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기준이 워낙 모호하기 때문에 촛스키의 책도 ‘테러 선전 간행물’로 취급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진보 운동을 탄압하는 전가의 보도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을 도와서 한반도 평화를 얻을 수는 없다

이라크 전쟁의 궁극적 목적은 중동 석유를 통제해 중국·러시아·유럽 등 잠재적 경쟁자들을 단속하는 것이다. 이라크 침략은 일종의 전초전인 셈이다.

만약 미국이 중동 전쟁에서 성공한다면 더 높은 자신감과 더 많은 군사적 여유가 생길 것이다. 이는 미국이 다른 지역에서 제국주의 경쟁자들을 노린 또 다른 군사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짐을 뜻한다.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동아시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반도도 여기에 휘말릴 수 있다.

최근 미국이 북한과 일시적 대화에 나선 것은 중동에서 이라크 수령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지 한미공조 덕분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자이툰 파병 연장에 반대해야 한다.

김용욱

광우병 쇠고기, 노무현이나 먹어라

지난달 방한한 한미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는 “쇠고기 전면 개방 없이는 한미FTA의 미국 의회 비준이 어렵다”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종용했다.

이에 응답하듯 한국 정부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무역대표부·농무부 고위 협상단과 ‘밀실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측 통상교섭본부가 뼈 있는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한국 농림부 관료에게 “한미FTA가 걸려 있는 문제이므로 좀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며 쇠고기 수입 확대를 주문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은 “‘모든 뼈는 위험하다’는 조건도 충분한 설명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미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에서 생산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비과학적’이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1백 건 이상 발생했고, 심지어 20개월 된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소 갈비뼈의 골수가 광우병을 전염시킨 사례가 발견됐고, 심지어 살코기에서도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이 발견됐다.

게다가 미국의 사료 정책은 광우병 위험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 광우병 위험 물질이 포함된 사료를 돼지·닭에게 먹이고 이 동물들을 다시 사료로 만들어 소에게 먹이기 때문에 교차 오염으로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영국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시행하다 신규 광우병 감염 소가 2만 7천 마리나 발생해 폐기한 정책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비준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위험천만

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 벌써 몇몇 학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에 사용한 사례가 발각되기도 했다.

노무현은 임기 안에 한미FTA가 비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선 직후 임시국회에서 한미FTA를 비준한다는 얘기도 술술 나오고 있다. 이명박·정동영뿐 아니라 ‘환경 후보’를 자처하던 문국현마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찬성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한미FTA 반대 운동 진영은 더욱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막고 한미FTA를 저지하려면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 같은 대중 투쟁의 힘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미FTA와 광우병 쇠고기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지지와도 결합될 필요가 있다.

박건희

광우병 쇠고기 먹어야 할 사람들



이명박

“한미FTA에 찬성하는 만큼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하자는 게 이 후보의 입장”(한나라당 대변인 나경원)



정동영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에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인정하는 이상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도리는 없다”



문국현

“미국산 쇠고기 반대는 미국 업자 차별하는 것”

비상사태 선포에 맞선

파키스탄 민중의 투쟁

타리크 알리가 진단하는 파키스탄 비상사태의 배경과 전망

파키스탄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어제[11월 3일] 군부의 비상사태 선포에 결코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파키스탄에서 계엄령은 이제 항쟁제가 돼 버렸다. 즉,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복용량을 갑절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어제 일어난 일은 쿠데타 속의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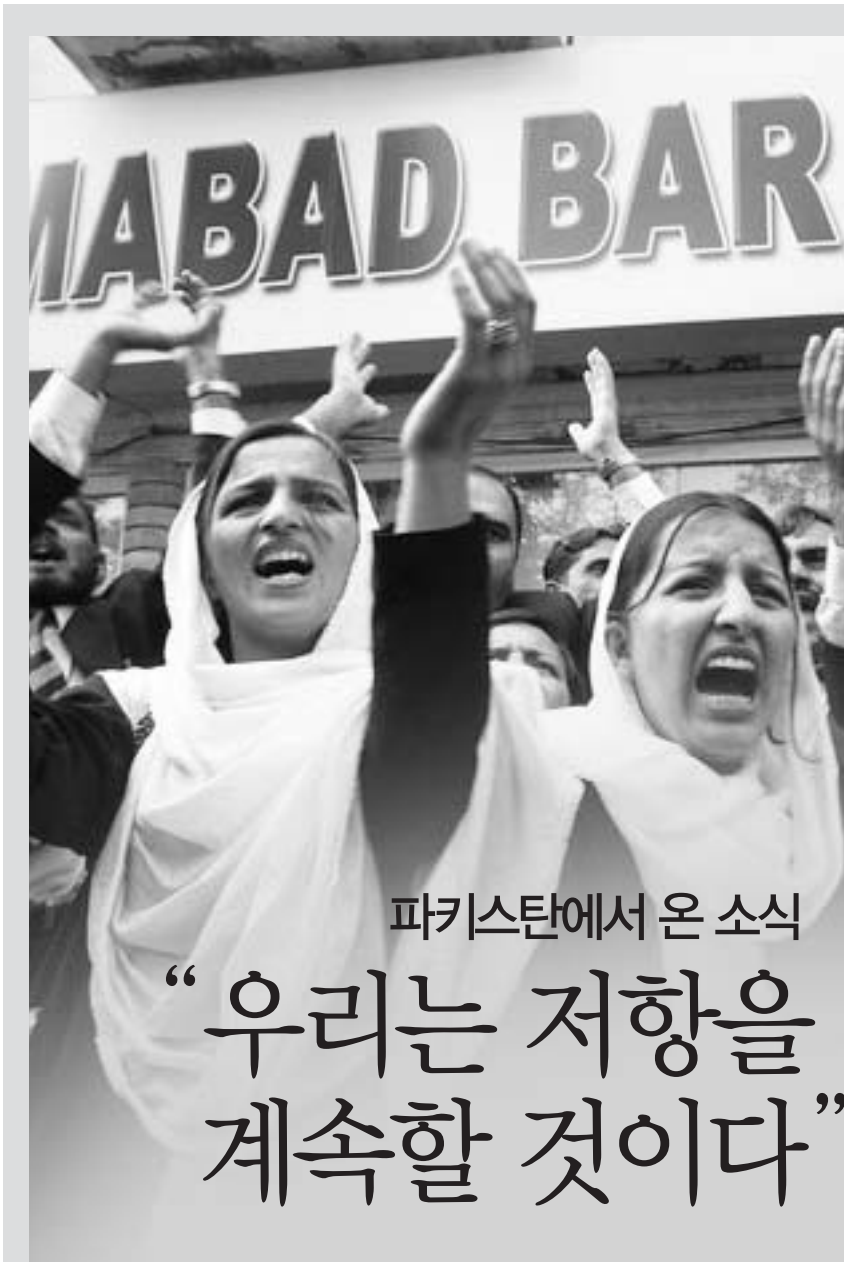
페르베즈 무샤라프 장군은 민간인인 척하며 파키스탄을 통치했지만, 그의 권력 기반은 군대로 국한돼 있었다. 그리고 어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973년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관영 방송 이외의 방송 송출을 모두 중단시키고, 이동통신망을 차단하고, 무장 폭력배들을 동원해 대법원을 포위하고, 대법원장을 해임하고, 변호사협회 회장과 파키스탄인권위원회 활동가들을 체포하고, 그래서 파키스탄 역사에서 또 다시 수치스런 시대의 시작을 알린 사람도 육군 참모총장[무샤라프]이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은 다음주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이 무샤라프의 선거 출마를 불가능하게 만들까 봐 우려했다.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한 결정은 몇 주 전에 내려졌다. 베나지르 부토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파키스탄을 떠났다. 언론 보도는 부토가 귀국 길에 올랐다고 한다. 그러나 부토가 이끄는 정당의 고위 지도자인 아이트자즈 아산이 쿠데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음에도 아직까지 부토는 새 계엄령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권력의 향에 취해 있었던 부토는 이제 권력을 잡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지 모른다.

희망

만약 부토가 이번 계엄령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가 될 것이다. 만약 부토가 장군[무샤라프]을 버리기로 결심한다면(부토는 무샤라프가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으므로 독재자와 계속 동맹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다) 부토는 미국 국무부 - 그동안 부토와 무샤라프의 동맹을 종용해 온 - 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차기 미국 국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제임스 루빈은 최근 디출리 파크(영국 외무부 산하 연구소)의 비공개 모임에서 파키스탄측 인사들이 자신의 견해 - 파키스탄 서부의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부토가 결정적 구실을 했다는 - 에 이의를 제기하자 신경질을 부렸다.



파키스탄에서 비상사태에 맞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비상사태 선포 이틀 만에 파키스탄 전국에서 2천여 명이 연행됐다.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활동하는 '국제사회주의자들'의 리아즈 아흐메드가 비상사태 선포 직후 카라치에서 벌어진 항의 행동 소

식을 보내 왔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다음 날인 11월 4일, 2백 명이 넘는 좌파 활동가, 노동조합 활동가, NGO, 정당, 전문직 종사자, 변호사, 언론인, 지식인 등이 카라치 언

론회관에 모였다. 우리는 무샤라프의 비상사태 선포와 라호르·이슬라마바드·카라치 등지의 변호사와 활동가들 체포를 규탄했다.

분위기는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군부와 제국주의를 규탄하고, 사법부와 언론에 대한 공격 등을 성토했다. 또, 모든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군사 독재의 종식을 위해 계속 활동하기로 결의했다.

11월 5일에도 1백50명이 카라치 언론회관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집회는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좌파, NGO, 노동조합 활동가, 민족주의 정당, 그리고 개인들의 연합인 '정의를위한민중운동'이 호소한 것이었다.

곤봉을 든 경찰의 습격으로 시위대 일부가 부상을 입었고 연행되기도 했다. 연행자 중에는 '정의를위한민중운동' 소집자이자 파키스탄 노총의 활동가인 파리드 아완, 국영은행 노조 의장 리아파트 사히, 그리고 3명의 사진 기자 등이 포함돼 있었다.

4백여 명의 경찰과 사복 경찰이 카라치 언론회관을 에워싸고 밖으로 나오는 시위 참가자들을 연행했고, 시위대가 카라치 언론회관으로 진입하는 것도 방해했다.

이 날 집회는 집회 장소를 떠나지 않겠다는 시위대의 단호한 결의와 저항운동을 발전시키려는 강력한 열망이 돋보인 훌륭한 항의 행동이었다.

카라치 시와 신드 주 고등법원에서도 시위들이 벌어졌다. 변호사들은 법원 안팎을 행진하며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 경찰이 공격해 변호사 1백10여 명을 연행했다.

파키스탄 전역에서 2천여 명의 변호사와 인권운동가 등이 경찰과 준군사조직에 의해 연행됐다. 변호사들은 비상사태가 철회될 때까지 재판 업무를 계속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비상사태의 표적이 된 두 기관은 사법부와 독립 TV 방송국들이다. 이 방송기자들은 정치인들한테서는 결코 들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방송인 지오TV(Geo TV)는 외국으로 방송을 계속 내보냈다. 지오TV의 가장 날카로운 기자 중 한 명인 하미드 미르네 어제 오후에 자신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대사관이 이번 쿠데타를 사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대법원장을 "탈레반에 동조하는" 성가신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1년 내내 무샤라프 정권은 심각한 정당성 위기에 시달려 왔다. 올해 초 무샤라프 장군이 대법원장 이프티카르 후세인 초드리를 해임하자 이에 항의하는 대중 운동이 6개월 동안 지속돼 결국은 정부를 물러서게 만들었다. 초드리의 일부 판결들은 "실종된 재산자들", 여성 성희롱, 졸속 사유화 등의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정부의 입장을 거스르는 것이었다. 정부는 초드리가 군인의 대선 출마를 불법이라고 선언할까 봐 우려했다.

국가와 사법부 - 항상 취약했던 - 간의 권력 분립을 요구하는 투쟁은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과거에 파키스탄의 법관들은 대체로 정부에 순응했다. 군부 지도자들에게 저항한 법관들은 회유·협박·공갈·설득 끝에 법복을 벗곤 했다. 파키스탄 법관들의 출신 환경은 다른 지배 엘리트들과 다르지 않다. 대법원장의 저항이 그토록 놀랍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런 저항을 통해 그는 엄청난 존경을 받게 됐고, 최고 인기 '상품'이 됐다.

대법원장

세계 언론에 비치는 파키스탄의 모습은 군장성들, 부패한 정치인들, 수염이 텃수룩한 광신도들의 나라이다. 대법원장의 복귀를 요구하는 투쟁은 파키스탄의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헌법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이 운동으로 사람들의 희망이 되살아났다. 대다수 사람들이 체제로부터 소외되고, 지배자들을

냉소하고, 그들의 부정 축재와 허영심으로 말라비틀어진 얼굴을 보며 한없는 불신을 느끼고 있던 때에 말이다.

어제 대법원은 특별회의를 열어 새 계엄령을 "위법·위헌"으로 선언하는 영웅적인 결정을 내렸다. 서둘러 임명된 새 대법원장의 본질, 즉 군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곧 드러날 것이다. 만약 헌법이 3개월 이상 정지된다면 그 때는 무샤라프조차 군부에 의해 제거되고 새로운 독재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이번 비상사태가 대법원을 숙청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다. 무샤라프가 대국민 담화 방송에서 밝힌 내용이 그것이다. 어느 경우든 내년 1월 선거가 총체적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어느 경우든 암흑의 끝을 향한 파키스탄의 오랜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

■ 타리크 알리는 파키스탄 출신 사회주의자이고《신좌파 평론》편집자이자 베티출판사(verso) 대표이다. 국내에는《근본주의의 충돌》(미토)등이 번역돼 있다.



혁명의 국제적 확산을 촉구하는 포스터, 1920년(왼쪽)
1917년 7월 18일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를 지지하는 사병들의 행렬(우)

[편집자 주] 올해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 90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해 2회에 걸쳐 러시아 혁명 90주년 특집 기획을 연재한다.

- 1회 ① 1917년, 혁명 속의 러시아
② 혁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
③ 혁명의 국제적 파장
2회 ④ 대중의 힘
⑤ 노동계급을 이끈 정당

1917년 러시아 혁명 –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보여 주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급진적인 새 사회가 시작됐다. 노동자들이 생산을 통제하고, 토지가 경작자들에게 분배되고, 영토 합병 없는 [전쟁 종결과 함께] 즉시 평화가 실현되고, 식민지 주민들에게 자결권이 보장됐다.

이런 조치들은 1917년 11월 7일(당시 러시아에서 사용되던 달력으로는 10월)이었고, 이 때문에 10월 혁명으로 알려지게 된다) 러시아의 수도 페트로그라드(오늘날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장악한 노동자들·병사들·수병들이 단 몇 시간 만에 취한 조치들이었다.

그런 조치들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권리들을 보더라도 거대한 전진이었다. 새로운 소비에트 헌법은 여성에게 완전하고 동등한 투표권을 보장했다. 영국은 1928년에야 그렇게 했고, 스위스 여성들은 1971년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말이다.

동성애와 낙태가 합법화됐고, 배우자 일방의 요청만으로 이혼이 가능해졌다. 영국인 대다수가 그런 이혼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1969년이었고 낙태와 동성애는 1967년에야 합법화됐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됐지만 – 새 국가는 특정 종교를 우대하지 않았다 – 종교의 자유가 보장됐다. 소비에트 러시아 남동부 대

부분 지역에서, 자기 결정의 원칙에 따라, 무슬림 학교들이 자유롭게 설립·운영됐다.

민주주의

오늘날 우리는 매우 제한적인 형태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 우리는 대체로 [4~15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지만 정부가 하는 일 – 예컨대, 우리를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일 따위 – 을 통제할 수 없다.

기업은 노동자를 수천 명씩 해고하고, 금리는 요동치고, 집값은 대다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는다. 이 모든 일은 기업의 이사회나 본사에서 소수가 멋대로 결정한다.

노동자들이 자신이 만든 제품이나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진지한 토론거리조차 못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비에트 민주주의는 공장·농촌·지역사회의 대중 집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평의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선출해 준 사람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소환될 수 있었다.

페트로그라드에서는 1917년 6월과 10월에 1만 5천 명 이상이 공장위원회 선거와 소비에트 선거에 참여했다.

러시아 노동자들은 1905년에 혁명으로 분출한 대중 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처음으로 소비에트를 건설했다. 1917년 2월 러시아에서 다시 혁명이 터졌을 때,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소비에트를 재건했다.

식품 가격에 항의하는 여성들의 투쟁이 촉발한 2월 혁명으로 당시 러시아의 지배자였던 짜르[황제]가 쫓겨났다. 그 뒤 8개월 동안 자유주의 정당과 중도좌파 정당들의 연립정부가 러시아를 통치하면서 서구의 의회민주주의를 모방하려 했다.

처음에 소비에트에서 득세한 사람들은 의회민주주의 지지자들이었다. 어쨌거나 의회민주주의조차도 당시 러시아에서는 거대한 진보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당들은 가장 중대한 정치 문제, 즉 러시아의 제1차세계대전 참전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페트로그라드의 평범한 노동자들은 급진적 해결책을 요구했다. 1917년 여름 내내 페트로그라드의 각 공장위원회 선거에서 볼셰비키가 잇달아 승리했고, 처음에는 장교들

이 득세했던 병사 소비에트를 포함해 여러 소비에트에서도 볼셰비키가 다수파가 됐다. 1917년 2월에 1만 명이었던 볼셰비키 당원 수가 10월에는 25만 명으로 급증했다.

10월 혁명에 대한 가장 큰 거짓말은 레닌과 볼셰비키가 어느 날 밤 술그머니 기어 나와 러시아 대중 몰래 권력을 찬탈했다는 것이다.

두 차례 혁명의 핵심이었고 유럽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혁신적이었던 러시아 노동계급이 누군가가 자신을 몰래 권력을 찬탈하도록 내버려 뒀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급진화

사실, 1917년 2월부터 10월까지 정치적 급진화 과정이 있었다. 처음에 노동자들은 입헌 민주주의를 약속한 정당들이 평화를 가져다주고,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경제적 혼란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 정당들은 모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미 1917년 7월에 페트로그라드의 노동계급은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볼셰비키는 그 반란에 반대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의 노동자와 농민들이 아직 그런 결론에 이르

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8월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혁명을 파괴하려 했다. 공식 정부는 발발 땀었다. 볼셰비키가 이끄는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군사 쿠데타를 물리쳤다.

10월쯤 정부는 자신이 러시아를 통치한다고 큰소리쳤지만 사실은 대중의 지지를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했다. 옛 소수 특권층은 정부를 경멸했고 복수를 원했다. 러시아 대중은 빵·토지·평화를 원했다. 볼셰비키는 빵·토지·평화를 약속하면서,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셰비키 당은 대중의 압력을 받으며 행동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전략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끊임없는 쌍방향 과정이었다.

그 말은 볼셰비키 당이 자신의 오랜 정책을 가운데 일부를 버렸다는 뜻이다. 예컨대, 볼셰비키는 토지 국유화 요구를 폐기하고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했다. 볼셰비키 당은 또, [당장] 혁명을 일으킬 필요성이나 독일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엄청난, 흔히 공개적인 논쟁을 벌였다.

10월 혁명은 결코 독재정권을 만들어 내지 않았다. 오히려 대중이 새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10월 혁명의 토대였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대중적 참여를 단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다.

크리스 뱌버리

혁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

러시아 혁명은 탄생 첫날부터 공격에 직면했다. 혁명이 성공한 지 겨우 이틀 만에 반혁명 군대가 페트로그라드로 진격했다. 페트로그라드에서 [소비에트의] 권력 장악을 막으려다 체포된 뒤 혁명에 맞서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풀려났던 사관생도들이 반혁명 군대에 가세했다.

급박하게 조직된 민병대 부대들이 도시 방어를 준비하는 동안 소비에트는 남녀 노동자들을 파견해 진격해오는 병사들을 만나 혁명에 맞서 싸우지 않도록 설득하게 했다.

노동자 민병대는 반란을 진압했고 그 사이 도시로 진격해오던 반혁명 군대는 와해되기 시작했다.

1918년 1월 1일부터 레닌 암살 기도들이 잇달아 일어났다. 얼마 안 있어 다른 볼셰비키 지도자들이 암살됐다. 혁명이 일어난 지 몇 주 만에 서방 강대국들의 재정 지원을 받은 전직 장교와 장군들이 서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반혁명 군대들을 조직했다.

서로 전쟁을 벌이던 서방 강대국들은 혁명에 대한 증오에서만큼은 한마음이었다. 볼셰비키는 전쟁중에 병합한 영토를 하나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독일과 평화 협상을 개시했다.



1918년 독일 혁명 당시 바리케이트

협상이 결렬되자 레닌이 평화조약 승인의 필요성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독일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산업과 농업 지대들 중 일부로 더욱 깊숙이 진출했다.

적위대

그러는 동안 영국과 프랑스 군대는 페트로그라드 북쪽의 아르한젤스크를 장악해 반혁명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혁명 파괴를 목표로 한, 12개가 넘는 다양한 국가들의 개입에서 선발대 구실을 했다.

1918년을 지나면서 경제난이 심해졌

혁명의 국제적 파장



1919년 3·1 운동은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부상한 민족해방 운동의 일부였다

국제주의는 원칙과 실천적 필요 모두에서 러시아 혁명의 핵심이었다. 볼셰비키는 혁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확산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노동자들은 제1차세계대전이라는 학살극에 치를 떨고 있었다. 전 세계에서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다. [러시아] 혁명은 수많은 사람들이 급진적 변화를 위해 싸우도록 고무했다.

1917년 이후 2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격변이 일어났다. 1918년에 독일 제국은 붕괴했고 “인민위원회”이 새 정부를 구성했다. 이탈리아에서는 1919~20년 동안 ‘붉은 2년’이라고 알려진 투쟁 물결이 있었다.

[독일] 바이에른과 헝가리에서는 반란이 일어나 잠시 동안 소비에트가 수립됐다. 1918년에 스페인 발렌시아의 파업노

동자들은 거리 이름을 “레닌”과 “10월 혁명”으로 바꿨다. 영국에서는 1919년에 소요와 파업 등이 분출했다. 프랑스와 영국 군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지배계급은 공포에 떨었다. 1919년 3월에 작성한 비밀 전언에서 영국 총리 로이드 조지는 프랑스 총리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유럽 전체가 혁명의 기운으로 가득하다.” 1917년에 전 세계의 3분의 2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다. 혁명은 식민 지배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줬다.

볼셰비키는 가장 먼저 민족해방 투쟁의 중요성을 깨닫고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국제 운동의 필수불가결한 일부로 여긴 세력 중 하나였다.

새로운 혁명 국가는 영국의 지배에서 독

다. 점점 더 많은 페트로그라드 노동자들이 반혁명에 맞서 싸우는 적위대에 보내지거나 몰자부족 심화에 직면해 경제 붕괴를 막는 데 투입됐다.

그러나 커다란 희망이 하나 있었다. [러시아] 혁명의 전체 기초는 [러시아] 혁명이 더 광범한 유럽 혁명의 서곡이 되리라는 것이었다. 특히 러시아 노동자들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일 뿐 아니라 가장 강력한 노동계급이 존재하는 독일에 기대를 걸었다.

1918년 11월 7일 페트로그라드는 대규모 행사와 시위들로 혁명 1주년을 경축했다. 독일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때문에 사실상 제1차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소식이 남아들었다.

독일 수병들은 소비에트를 건설했고 이것은 공장과 도시로 확대됐다. 독일 황제는 망명했고 권력은 거리에 있었다.

2년 동안 혁명이 유럽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레닌과 볼셰비키는 그러한 혁명의 성공에 기대를 걸었다. 그들이 러시아 [혁명]을 유럽 전체를 삼킬 불길의 첫 불꽃으로 본 것은 옳았다. 유럽 혁명의 실패는 그들 탓이 아니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볼셰비키 같은 당, 즉 조직돼 있고 기층 수준에서 [혁명을] 이끌 수 있는 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혁명적 기회를 유실시킬 수 있었다.

랍을 획득하기 전에 이미 새 아일랜드 공화국을 인정한 첫 국가였다.

볼셰비키는 “러시아 인민의 평등과 주권”뿐 아니라 과거에 [러시아] 제국에 예속됐던 국가들이 독립할 권리도 선포했다.

이러한 조치들로 혁명 이후 몇 년 동안 러시아에서 독립한 5개의 국가와 약 17개의 [소비에트] 연방 내 자치 지역들이 생겨났다.

혁명의 여파로 민족해방운동 내에 급진적 경향이 등장하는 한편 전 세계에서 새로운 공산당들이 형성됐다. 1920~21년에 터키·이집트·인도·인도네시아·중국에서 새로운 공산당이 창립했다.

중국 노동자들 수만 명과 [소비에트] 연방 내 무슬림 국가 출신 노동자들 25만 명 가량이 혁명 수호를 도우려고 적군에 가담했다.

볼셰비키의 국제주의는 국제적 운동을 건설하고 [그 운동 참가자와] 토론하는 것을 뜻했고 그 결과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이 건설됐다.

내전이 한창이던 1920년 볼셰비키는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극동인민대회를 열었고 여기에는 유럽은 물론 아시아와 중동 전역의 국가들에서 온, 2천 명이 넘는 대표단이 참가했다.

영국은 이런 대표단을 태운 선박을 공격했다. 그러나 영국 전함들은 터키 대표단이 총화에 도착하는 것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소비에트의 초기는 틀림없이 오늘날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선 국제적 운동에 영감으로 남을 것이다.

에스미 추나라

동행취재 | 홈에버 면목분회 승선화 대의원의 하루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이중 삼중의 굴레 속에서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은
파리 코윈의 여성 투사 루이즈 미셀이
법정에서 자신과 파리 코윈의 대의를
방어하면서 한 말에서 따온 것이다.

거센 신자유주의 파고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삶은 크게 후퇴했다. 여성 노동자들의 70퍼센트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기혼 여성들은 주로 임시직으로 재취업하면서 비정규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정규직 여성들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36.8퍼센트만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1백73만 명 중 무려 65퍼센트가 여성이다. OECD는 회원국 중 한국이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고 해마다 지적해 왔다.

노무현의 비정규직 ‘보호’ 사기극은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절망적으로 악화시켰다. 법 시행 이전부터 계약 해지와 외주화 칼바람이 몰아쳤다.

그러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자, 감동적인 투지가 솟구쳤다.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군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은 비정규직 악법의 더러운 본질을 낱알이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이중 삼중의 굴레 속에 사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주소를 보여 주고 있다.

골병

지난 11월 1일, 이랜드 회장 박성수 집앞으로 시위를 하러 가는 홈에버 면목분회 승선화 대의원을 만났다. 승선화 씨는 사측이 홈에버 상암점 점거에 참가한 조합원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계속 찾아내 손배가압류를 청구하고 있다는 얘기부터 꺼냈다.

“80만 원 받는 우리한테 무슨 1억 원씩 손배를 때리냐고요. 난 이게 사람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월급을 주고 손해를 묻든가. 난 2억 2백만 원이나 맞았는데 평생 벌어도 못 갚아요. 믿는 건 이 싸움 끝나고 모든 걸 철회시키고 들어가는 거예요.”

박성수 집 앞 집회를 마치고 홈에버 목동점으로 차도 행진을 하던 중에 갑자기 트럭 한 대가 나타나더니 의도적으로 정체를 명의 뿌연 가루를 대열에 뿌리고 가버렸다.



여성 노동자들의 불굴의 투쟁은 ‘차별과 눈물’의 공간을 ‘단결과 해방’의 공간으로 바꾸었다

연신 콧물거리던 승선화 씨는 네 달 동안 겪은 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했다.

“말도 못하죠. 지금은 벌써 이렇게 춥지만 여름에 아스팔트 바닥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아니면 소낙비가 쏟아지고, 구사대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요. 코뼈 부러지고 눈 밑이 찢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경찰한테 성추행 당한 조합원도 있어요.”

무엇이 그녀를 이런 투쟁으로 이끌었을까. “나도 ‘투쟁’이니 ‘단결’이니 잘 몰랐어요. 2003년 6월에 입사해서 샐러드바 일을 했는데 처음엔 급여가 50만 원이었어요. 바로바로 조리해서 먹는 음식이니까 샐러드가 떨어지면 밥 먹다가도 달려가서 해 줘야 했죠. 아침 7시에 나오면 오후 4시 퇴근인데 다음날 쓸 재료를 준비하느라 저녁 7시에 퇴근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늦게 끝나도 수당은 안 줬죠.

“칼질하다 손에서 피가 질질 날 때도

혼자 치료하고 일했어요. 아프다고 집에 가면 그만두라 할까봐.

“1.8리터 짜리 식용유가 20통씩 들어오고, 밀가루 포대 들어오고, 닭은 한번에 1천 마리까지 들어와요. 한 박스에 20마리 들어가는데 14킬로예요. 그거 날라야지, 음식 만들어야지. 물건이 일주일에 두세 번 들어오는데 그거 나르느라 골병이 들었어요.

“청소할 때 쓰는 세제가 굉장히 독해요. 가정용의 몇 십 배야. 상처에 묻으면 다 헐어버려요. 누구는 세제가 한방울 눈에 튀었는데 금방 실뿔줄이 다 터지더라고요.

“립스틱은 무조건 새빨간 색이어야 했어요. 방학점 같은 경우엔 야에 출근할 때 입구에서 검사하고 발라 줬대요.

“계산원들이 8~9시간 서서 일하면서 화장실도 못 가고 방광염에 걸렸다가요. 나가면 바로 고객 화장실이 있는데 그걸 못쓰게 했어요. 직원 통로로 화장실 가야 되는데 눈치 보이니까 두세 번 갈 걸 한번에 간단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까지 일했어요. 내가 찢리면 자식이 학원 한 군데를 못 다니니까 회사의 횡포를 다 참았던 거죠.”

여성 가장

그렇게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자식들 챙기랴 집안일 하랴 쉴 틈이 없었다.

“밤에 가면 집안일이 많이 쌓여 있는데 내 새끼는 힘들게 안 하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거든요. 또 애들 오면 밥이라도 한 숟갈 먹이고 재우려다 보니까 밤 12시 전

에 잔 적이 없어요. 6시면 일어나서 큰애 아침 챙겨 줘야 하고...

“오늘은 애 도시락 싸고 바쁘다 보니까 빨래도 못 널고 왔네요. 꼬맹이 교복 블라우스는 급한 건데. 집안일이 밖에서 하는 것보다 더 바빠요.”

그나마 자신은 아이들이 커서 나온 편이지만 여성 가장인데다 아이가 어린 조합원도 많다고 했다.

“IMF 터지고 여자들도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돈 벌러 많이 나왔잖아요. 나도 실질적인 가장이에요. 나한테 식구들 생계가 달렸으니까. 내가 80만 원 받던 거 2백만 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만 하게 해달라는 건데 왜 안 되냐고요.

“우리 엄마들이 전에는 비정규직법 그런 거 몰랐어요. 5월부터 4백 명을 서서히 찼었는데 지금은 전체 해고자가 1천 명이 됐어요.

“해고도 다 문자로 해요. 출근해서 락카실에서 옷 갈아입는데 문자 받은 사람도 있어요. 기가 막히죠. 뉴코아 국정감사한 걸 보면 아무 내용도 없는 계약서에 도장만 찍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0개월 계약서’인데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 계약서도 나 쉬는 날 과장이 썼어요. 이견 실명제고 자필인데 왜 마음대로 하나 이거예요.”

승선화 씨는 자신은 아직 해고당하지 않았지만 2년 안에는 계약 해지 당할 것이라며, 지금 대학 졸업반인 딸도 정규직이 되리란 보장이 있겠냐고 물었다. 그래서 비정규직 법을 꼭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몇 달째 별이가 없어 집회 나갈 차비조차 궁하지만 승선화 씨가 투지를 잃지 않는 이유다.

요즘 많은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이 약속한 생계비를 기다리며 애태우고 있다. 승선화 씨는 주말에 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다. 거칠어진 손은 접시 수천 장을 설거지하다 다친 탓에 피멍이 들어 있었다.

고된 투쟁이지만 승선화 씨는 연대하는 사람들 덕분에 힘을 낸다고 했다. “모여야 힘이 되는지 몰랐죠. 지금은 그 힘이 참 크구나 느껴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대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코스콤 같은 데서 와달라 하면 달려가요. 연대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굉장하니까요.”

이랜드·뉴코아 여성 노동자들이 보여준 놀라운 투지는 여성이 수동적이고 낙약하다는 편견을 무너뜨렸다. 이랜드·뉴코아 투쟁에서 싹튼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단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뛰어넘는 연대는 비정규직 투쟁의 희망이자 이중의 굴레 속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희망이기도 하다.

승주

여성 노동자들은 피곤한 몸으로 돌아와서 다시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봐야 한다



단결이 확대될수록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모두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연대의 중요성

삼우정밀 노동자들의 승리에서 배운다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단결해서 승리한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백 마디 말보다 더 큰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대구 지부 삼우정밀지회가 바로 그런 사례다.

삼우정밀지회는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전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고, 파업을 통해 유니온샵을 쟁취했다.

삼우정밀지회 간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단협 때 사장이 끝까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것이 유니온 샵이었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뭉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삼우정밀지회는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다. 우선 한국인 노동자들을 설득해야 했다. 그 다음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노조와 함께하면 추방해 버리겠다”는 사측의 협박에 굴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그들을 조직해야 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사측의 감시를

피해 모임을 비밀리에 준비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이 중요했다.

한국인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 금속노조 대구지부, 그리고 통역을 도맡은 성서공단노조의 인도네시아 출신 활동가들이 매주 ‘대책 모임’을 열었다. 상황이 심각할 때는 매일 밤 토론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모임이 없었다면,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

삼우정밀지회는 단협 승리 뒤에도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 중 3년 계약 기간이 만료된 6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재계약하라고 사측에 요구했고 사측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다.

‘대책 모임’은 이주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에 더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사업장 내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상세히 토론했고 있다.

‘대책 모임’에서는 이주노동자들과 의사소통 하는 문제부터 관리자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잔업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 나아가 고용허가제의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한다. 이 과정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법이나 제도같은 사업장 밖의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 모임에 참가하고 있는 성서공단노조의 인도네시아 출신 활동가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단속 추방 문제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처음으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노조를 만든 삼우정밀 노동자들의 모범을 잘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이미 금속노조 대구지부 등에는 삼우정밀지회의 경험을 묻는 다른 노조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금속노조가 나서서 모범을 확대하려 노력하면 효과적인 것이다.

지금 삼우정밀지회는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 노동자들이 단결해 모두의 이익을 지키려는 투쟁의 선두에 서 있다. 삼우정밀 사측은 이 사례가 떠들썩하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지만, 선진 노동자들은 이 사례가 널리 알려지도록 해야 한다. 또 이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지지해야 한다.

이런 광범한 단결이야말로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길이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생각이 거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모든 상식이 진실은 아닌 것처럼, 이 주장도 진실이 아니다.

몇 달 전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는 이주노동력의 유입과 실업 사이에 관계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 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 6)

이 보고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본격 유입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전 산업과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된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음식, 숙박업)의 고용·임금 동향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내국인 고용 비중을 줄이거나 임금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은 오히려 국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고, 자본 집약도를 높여 살아남기 어려운 기업들을 유지시켜 관련 산업들에서 내국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확대해 온 측면이 있다.

진실

정부는 외국 인력 통제 정책의 기본 취지로 언제나 ‘내국인 노동 시장 교란 방지’를 내세운다. 또, 이주노동자의 직장 이동 금지도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한국인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의 연대를 막고, 심지어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자기 일자리를 빼앗는 집단으로 여겨 배척하게 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기업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유입해 노조를 무력화하거나 한국인 노동자들의 투쟁을 분쇄하는데 이용하기도 했다. 2006년 GS 칼텍스가 주도해 여수 산단에 3천 명의 동포들을 고용하려 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 이후 몇몇 지역 건설노조 투쟁 때 이주노동자 고용 반대 요구가 등장했다. 건설연맹은 중국과 구소련 출신 동포 이주노동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한 방문취업제를 사실상 반대했다.

그러나 건설 공병 현대화에 영향 받은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는 이주노동자를 몰아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려 한다. 우리가 반대해야 할 것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주들의 아비한 술책이다.

이주노동자를 배척하지 않고 노조에 받아들인다면 이주노동자들은 파업 파괴 구실을 하는 구사대로 동원되지 않고 노동조합을 통해 고용과 임금을 지키려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모두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우정밀지회는 이런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파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첼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그의 웃는 얼굴이 그리울 것이다

11월 1일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검 구름 동지가 작업장 안까지 들이닥친 단속반과 경찰에 붙잡혀, 현재 화성보호소에 수감돼 있다.

검 구름 동지가 단속되기 일주일 전, 어떤 한국인이 일자리를 구한다며 공장에 들렀다고 한다. 그런데 공장에 들이닥친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 중에 그가 있었다. 아비하게도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구직자로 위장해 사전 답사까지 한 것이다.

최근 정부는 이주노동자 운동의 주요 활동가들을 표적 탄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종로지역위 당원이기도 한 검 구름 동지는 이주노조 동대문분회장으로 헌신적인 활동가다. 이주노동자들을 당원으로 조직하는 등 민주노동당 활동에도 열심이었다.

그는 보호소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정부의 단속으로 MTU(이주노조)

가 많이 힘들다. 나는 비록 떠나지만 MTU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길 바란다” 하고 당부했다.

검 구름 동지가 십수 년을 일해 온 의류업종은 각종 미세 먼지로 가득한 전형적인 3D업종이었다. 끊이지 않는 잔기침과 가슴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성실히 일해 왔으나, 한국 정부가 그에게 준 것이라고는 불법이라는 딱지였다.

이젠 검 구름 동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컬러링을 들을 수 없다. 또 “이주노동자 투쟁과 반전 투쟁에 앞장서는 ‘다함께’가 자랑스럽다”며 웃음 짓던 그의 얼굴도 볼 수 없게 됐다.

이주노동자들은 공장, 시장, 버스·지하철에서 늘 마주치는 우리의 친구이자 이웃이다.

정부는 야만적인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김기선

돈 없는 사람들의 힘을 보여 주자

최근 법원은 뉴코아·이랜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억 1백만 원의 손배가압류 판결을 내렸다. 1백만 원도 못 받고 일하다가 이제는 돈 한푼 못 벌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말이다.

곧이어 지난 7월말 강남점 2차 점거로 연행됐던 조합원들과 연대 단체 회원들에게 1백~2백만 원씩 벌금형을 내렸다.

나도 강남점 점거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지난주 화요일 2백만 원의 약식명령 통지를 받았다.

반면, 이랜드 회장 박성수는 1천 명이 넘는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해 여성 조합원들을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확실시되자 해외로 도망가 버렸다.

지금도 뉴코아 조합원은 서울 창전동 서강대교 앞 철탑 위에서 “외주화 철회, 박성수 구속”을 외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고,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여전히 전면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법원의 손배가압류와 벌금형 판결은 울려부는 비정규 약법 시행에 맞서 비정규직 투쟁의 선봉대 구실을 했던 뉴코아·이랜드 투쟁에 대한 보복이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연대의 고리를 끊으려는 알뜰한 수작이다. 이럴 때일수록 민주노총이 뉴코아·이랜드 조합원들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한 50만 원 생계비가 빨리 나와야 한다.

돈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저들에게 돈 없는 사람들이 뭉쳐서 싸우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 주고 싶다.

최영준



지난 호를 읽고 ...

유류세에 대한 지난 호의 주장과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유류세 환급 혹은 화물차 운송노동자들의 유류세 인하 주장이 양립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주노동당과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유류세 환급, 공장에서 사용하는 중유에 대한 세금 인상(휘발유 대비 중유의 세금은 14분의 1 수준) 등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기업과 부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황철

‘권영길과 함께 범국민행동의 날 건설에 힘을 모으자’는 기사를 잘 읽었다. 다만, “대선보다는 내년 총선 준비에만 열을 올리는 당내 일부 세력 ... 은 진보정치 성장과 대중투쟁 건설 노력에 힘을 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썼는데, 적절치 않은 지적인 듯하다. 범국민행동을 열의 있게 조직하는 당 활동가 중에도 대선보다 총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총선 준비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범국민행동 조직 기권보다 훨씬 광범한 경향인 것 같다.

박설

지난 호 기사에서 문국현이 주장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와 비정규직 보호 등이 일관되지 못함을 지적한 게 도움이 됐다. 그러나 손석춘 씨와 이수호 대표가 얘기하는 후보단일화 주장을 논박하려면 좀더 근본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민주노동당이 계급적 기반이 다른 당과 연합하면 어떤 효과를 낼지, 우리 운동에는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따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은영

‘식품 가격의 진정한 피해자들’ 기사를 읽으며 과학은 그 자체로 진보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진일보라고 평가받았던 바이오에너지 기술에 자본(이윤추구)이 끼어들면서 제3세계의 식량 재배지가 대체에너지 식물 재배지로 바뀌어 가고 있으니 말이다.

김종환

주류 언론들이 앞뒤 맥락도 없이 일제히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폭력배로 몰아붙였는데, 지난 호 망향휴게소 관련 기사가 진실을 보도해 줘 좋았다.

류민희

지역 사회포럼

서울 중부

2007 대선과 진보정당의 과제

연사 : 김인식

(민주노동당 중구위원회 위원장)

일시 : 11월 21일(수) 8시

장소 : 인권실천시민연대 교육장(4호선 한성대입구역 7번 출구 동소문우체국 5층)

참가비 : 2천 원

문의 : 019-647-3309

서울 남부

2007 대선과 진보정당의 과제

연사 : 김인식

(민주노동당 중구위원회 위원장)

일시 : 11월 22일(목) 8시

장소 : 방배1동 동사무소(방배역 3번 출구)

참가비 : 1천 원

문의 : 010-2401-1987

인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연사 : 한규한(맞불) 기자

일시 : 11월 16일(금) 7시 30분

장소 : 한국토지공사 인천본부 4층 교육실

(인천터미널역 뉴코아 뒤편)

문의 : 010-7556-5508

대학 맑스주의 포럼

충남대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있는가?

일시 : 11월 22일(목) 6시 30분

장소 : 인문대 102호

문의 : 010-7181-6562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절망과 환멸을 끝장내는 방법

의사/ 보건의료전책연합 정책실장/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가

최근 김용철 변호사가 밝히고 있는 삼성과 국가권력의 유착을 보고 있노라면 보통사람들이 짐작하는 수준의 정경유착을 훨씬 뛰어 넘는다. “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이었다. 이해관계가 맞물린 재경부, 국세청은 규모가 훨씬 더 크다.” “삼성의 정보는 국가정보원을 능가했다. 청와대는 물론 국정원·검찰·경찰의 정보 보고가 매일 들어왔다.” 행정부에서 이 정도이니 국회나 입법부는 또 어떠할까? “분식회계를 통해 연간 1조 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삼성이 관리하는 것은 몇 명의 인맥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 그 자체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은 전혀 비유나 과장이 아니다.

이건희 · 이명박 · 이회창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나 법치는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사회의 여론이라는 말은 또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 법이 어떠하든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누구로 선출하든 간에 삼성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이 바뀐다. 아예 법의 집행과 국회의원과 입법부가 통째로 삼성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다.

언론 또한 예외가 아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부정을 처음 발표한 다음날 아침 이 사실을 1면으로 보도한 주요 일간지는 <한겨레>가 유일했다. 조중동은 사회면 2~3단 기사로 처리하고 말았다. 삼성에 의한 국가권력 탈취 쿠데타가 벌어지고 있으며 그 쿠데타가 성공했다는 폭로가 과연 사회면 2~3단 짜리 기사일까? 대부분의 언론 또한 삼성의 영향력 하에 있다.

절망이다. 1970~80년대보다는 한국 사회가 나아졌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과연 무엇이 나아졌는지를 묻는다. 50억 원짜리 비자금이 있다는데 금융당국은 1주일이 지나도록 계좌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

더욱이 대선 정국을 보면 도대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명



신자유주의는 부패를 척결하기는커녕 구조화했다

박의 독주도 못 봐주겠는데 이제 이회창까지 나서고 그 둘이 양강체제를 형성한다? 도대체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는가? 부패는 더욱 심해졌고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으며 차떼기와 병역기피 주범, 그리고 금융사기와 노조파괴의 주범이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나선다.

그러나 냉정히 보자. 한국 사회가 과연 무엇이었던가? 이른바 민주정부 아래서 부정부패가 척결된 적이 과연 있었나? 대중들의 진정한 민주주의적 권리가 향상됐던가? 한국의 정치지형이 변화된 적이 있던가? 없었다. 1987년의 거대한 대중투쟁과 이후의 꾸준한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적 권리들은 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침식됐고 권력은 자본에게로 더 집중됐을 뿐이다.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은 언제나 신자유주의가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는다. 신자유주의가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없애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

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전도사로 유명한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에서 “폐쇄적인 독점은 반드시 부패한다”라고 말하면서 신자유주의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 세금 감면,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과도한 복지 축소, 행정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올리브나무 몇 그루를 두고 싸우는 중동국가와 같은 비생산적이고 가난한 사회가 렉서스를 파는 부유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이와 같은 원리들을 교과서처럼 따라 온 한국사회는 어떻게 변해왔던가? 부정부패가 사라지기는커녕 더 구조화됐다. 정부

의 규제 철폐는 오직 자본의 이윤을 규제하는 제도의 철폐만을 의미했고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규제는 노동법 개악에서 보듯이 더욱 강화됐다.

한국 사회에서 재벌의 위치는 국가 그 자체이다. 이제 아예 4개 재벌의 생산이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그중 1위 재벌 혼자서도 국가를 농락하는 사회가 됐다. 신자유주의는 부정부패를 척결한 것이 아니라 구조화했다. 렉서스? 대다수 서민들은 8천만 원짜리 외제차는커녕 집장만도 어렵다. 권력자들과 소수 자본가들은 렉서스를 뇌물로 주고받으지 모르나 평범한 서민들은 그나마 있던 ‘올리브나무’마저 불타 버린 것이 오늘의 한국 사회다.

이러한 사회양극화와 민주주의 파괴를 누가 저질렀는가? 다름 아닌 바로 ‘민주정부’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그리고 ‘386’이라 불리는 열린우리당 등의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사회의 절망을 만들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 선택은 이 ‘민주정부’ 세력에게 지지를 보내느니, 차라리 정치를 ‘끓거나’ 반대세력인 듯한 한나라당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고 환멸만 남은 한국 사회의 신산스러운 모습이 바로 삼성공화국과 이명박과 이회창의 대선 정국이다.

한미FTA에 대한 반대가 여전히 40퍼센트 수준이고 비정규직 확대나 사회양극화, 이라크 파병 등에 대한 반대 여론과 저항이 크지만 이것을 대변하는 정치적 지향은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공화국과 이명박과 이회창의 대선을 끝장내는 것은 이제 온전히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몫이다. 더욱 대중적인 운동과 진보정당만이 대안이다. 비정규직 철폐와 한미FTA 반대, 전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거대한 대중 운동만이 한국 사회의 절망을 끝낼 수 있다. 11월 11일 거리에서 대통령 선거는 다시 시작돼야 한다.

‘대입 자율화’가 낳은 연세대 편입학 비리

얼마 전, 연세대 총장 정창영의 부인이 치의학과 편입학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폭로됐다. 파문이 커지자, 정창영은 총장직을 사퇴했다.

연세대 치의학과는 2001년 이후 매년 6명 정도를 편입생으로 뽑아 왔는데, 해마다 연세대 교수와 관계 있는 이들의 자녀가 1~2명씩 편입학했다. 이런 편입생들은 인기 전공을 독차지해 동료 학생들한테서 ‘로

열 코스’라고 불린다고 한다.

사실 교육부가 1998년부터 편입학 전형 기준과 절차 등을 대학 ‘자율’에 맡겨, 사립대들이 편입학을 악용할 여지를 만들어 줬다. 다른 대학에도 이런 비리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는 뒷집만 지고 있었다. 특히 수도권 주요 사립대들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제외’돼 왔다. 교육부가 ‘자율’을 핑계로 비리를 눈감아 준 셈이다.

게다가 연세대를 비롯한 명문대들은 3불(기여입학제·본고사·고교등급제 금지) 폐지 등 ‘대입 자율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정창영도 3불 정책을 비판하며 대학이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편입학 비리 사건은 학벌 구조가 엄연한 한국 사회에서 ‘대입 자율화’가 가져올 결과를 보여 줬다.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가 전면 도입될 것이고, 지금 부유층 자녀들이 받는 음성적 특혜가 합법으로 둔갑할 것이다. 대다수 학생들은 좁아진 입학 기회를 두고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것이다.

특혜를 위한 ‘자율화’가 실현돼선 안 된다. 오히려 대학 당국과 부유층이 유착할 수 없게, 직원·학생의 대학 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대학의 주요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근본으로 대학 간판에 따른 차별 자체를 없애야 돈과 지위를 이용해 학벌을 사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김영익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 인터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랜드 투쟁은 정규직·비정규직의 ‘아름다운 연대’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1996년 까르푸 시절에 노조를 만들었을 때만 해도 비정규직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히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2002년에 몇 명밖에 안 되는 정규직 조합원들이 3백 일간 파업을 했고, 2003년에 처음으로 단협을 체결했죠. 당시 회사측은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어요. 회사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노조에서 활동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비정규직이 엄청 늘어난 상태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언니 동생하며 함께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노조는 공개적으로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시작됐죠. 초기에 정규직 조합원들은 비정규직과 연대에 커다란 의지를 보여 주진 않았어요. 이럴 때 노조 지도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했지요. 지도부는 함께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고 정규직 조합원들을 설득했어요.

결국 정규직 조합원들도 비정규직 고용 보장이 안 되면 정규직 임금 체결도 하지 않겠다고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회사와 교섭 때도 비정규직 여성 조합원들을 내보냈어요. 또, 분회장, 노조 대의원 등 주요 직책을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맡겼어요.

적어도 노조 안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동등했던 것입니다. 이런 단결된 투쟁으로 일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또, 최초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주5일제를 따내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이랜드일반노조는 모든 중요한 결정을 조합원들의 분회 토론을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장 민주주의에서 노조 지도부와 현

장 조합원 사이에 거리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조 간부들은 현장 조합원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현장을 순회할 때 조합원들이 제기한 작은 불만 사항을 갖고 관리자들과 공개적으로 싸웠어요. 관리자에게 주눅이 들어 있던 여성 조합원들은 그런 것을 보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신들의 생각을 거침없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조합원 총회나 회의에서도 나타납니다. 가끔 억지 주장을 하는 조합원을 보면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충분히 듣고 토론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우리는 회사와 협상하면 모든 내용을 반드시 조합원들에게 공개했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었어요. 현장 민주주의는 전임 간부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전임 간부를 오래 하면 현장 조합원 정서와 괴리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임 간부는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랜드 노동자들은 단호한 점거파업을 몇 차례나 강행했습니다. 점거파업의 효과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매장 점거파업은 연대의 초점이 됐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점거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조합원들이 ‘우리가 투쟁에 앞장설 테니 위원장은 따라오

기만 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매장 한 곳 점거파업이 경제적 타격을 주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60개 매장을 모두 점거할 수 있었다면 승리했을 겁니다. 아쉬운 점은 1차 점거파업 이후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 확대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투쟁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1차 상암점 침탈 전에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이 교섭에 치중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이랜드 투쟁에 연대해 온 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정말 헌신적으로 연대해 왔습니다.

이랜드 투쟁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상 이 투쟁은 이미 승리한 측면이 있어요. 회사측이 외주화 철회, 정규직 인사이동 제한, 18개월 미만 고용보장, 해고자 복직, 2년 이상 근무자 정규직화 등을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직무급제, 임금인상, 차별시정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죠.

무엇보다 비정규직 투쟁의 구심 역할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투쟁이잖아요.

지금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연대파업을 해 줬고, 서울본부도 연대파업을 준비중이죠.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열의는 여전합니다. 이것을 모아 낸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적금을 해약하고 손배가압류에 힘들어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극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투쟁은 7월 1일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약법 시행과 맞물려 주목받았는데요?

저는 열성 노사모 회원이었죠. 노무현이 당선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도 노동부의 태도는 그대로였고 경찰과 법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노무현이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을 보고, 노사모를 탈퇴했는데 이제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노무현)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그들에게 연대하려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감옥에 있을 때 서울대병원 노조 한 간부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노하우를 알려 달라고. 그런데 서울대병원 노조는 비정규직 투쟁을 우리보다 잘해 왔던 곳 아닙니까.

저는 이랜드 투쟁을 하면서 곳곳에서 비정규직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하는 동지들이 많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됐어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함께 투쟁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 파업에 승리를!

81.6퍼센트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던 전국건설플랜트노조 울산지부 노동자들이 11월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일하고 법정 휴일에는 쉬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05년 투쟁 때도 노동자들은 “밥 먹을 공간을 달라, 화장실을 지어 달라”고 요구했었다.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1970년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체들은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면 교섭하겠다고더니, 노조가 일부 명단을 공개하자 표적 해고를 시도하고 있다. 최영철 울산지부 기획국장은 건설업체들이 “빨강, 노랑, 흰색으로 구분된 8백50여 명의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2005년 파업 당시에도 악명을 떨쳤던 SK는 노동자들이 노조 배지를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건설 현장 출입을 막고 있다. 울산지검은 “불법 행위 엄정대처”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고, 경찰은 울산지부 간부들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삼성 비자금 수사에는 ‘신중한’ 검찰과 경찰이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신속한’ 탄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강력한 파업으로 SK 건설 현장의 작업률은 50퍼센트를 밑돌고 있다. 노동자들은 SK 건설 현장 등에서 피



켓팅을 벌이며 대체인력 투입을 막고 있다. 울산지부의 파업은 이미 진행중이던 울산 홈에버, 삼성SDI, 효성재활원 등 울산 지역 노동자 투쟁과 건설노조 정해진 열사 투쟁 등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들불

울산지부는 이미 2005년에 단호하고 인상적인 파업과 승리로 우리를 고무한 바 있다. 2005년 울산지부 파업은 2006년 대구경북건설노조 파업, 포항건설노조

의 포스코 점거 파업 등으로 이어졌다.

올해 여수, 포항, 울산, 광양의 노동자들이 전국건설플랜트노조로 통합한 것은 이런 투쟁의 성과였다. 노무현 정부와 지배자들은 가장 밑바닥의 건설 노동자들이 들불처럼 투쟁과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다.

울산지부의 투쟁이 단호한 파업과 강력한 연대 속에 승리한다면 다시 한번 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며 건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오정숙

철도 · 화물 노동자들의 막강한 힘을 보고 싶다

10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 정의행위를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폐지 두 달을 앞둔 구시대적 노동악법을 휘두른 것이다. 더구나 철도노조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밝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시대착오적 만행에 맞서 철도노조는 직권중재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다. 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53퍼센트의 조합원이 파업을 찬성했다. 철도노조는 11월 1일 신형 전기관차 1인 승무 시범운행 거부 투쟁을 성공시키며 본격적인 쟁의를 시작했다.

철도노조와 공동 투쟁을 결의한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투쟁하고 있다.

지난 31일 파업 중이던 화물연대 서울우

유지회 조합원 두 명이 안타깝게도 분신을 시도했다. 서울우유 사측은 과적을 강요하고, 운송료도 10년 동안 동결해 왔고, 최근에는 운행시간과 운행거리를 늘리기도 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화물연대 탈퇴를 강요하며 노조 파괴를 시도했다. 두 동지의 분신 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다시 보여 줬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의 경찰은 분신을 시도한 노동자를 방화 혐의로 조사했고, 90여 명의 조합원들을 연행했다. 이에 화물연대 지도부는 서울우유에 맞선 전면 투쟁을 선포하고 전국적인 힘을 모으고 있다. 화물연대는 71퍼센트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

한 상태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11월 16일 공동 파업 돌입을 결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에 직권중재를 내리면서 “노조가 정의행위를 할 경우 ... 1일 평균 2백65만 명의 승객과 12만 톤의 화물 운송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까지 결합하면 그 힘은 더욱 막강할 것이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단호하게 공동 파업을 강행할 때 해고자 복직, KTX 직접 고용, 구조조정 중단, 인력충원,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등의 요구들을 쟁취할 수 있다.

최용찬

‘비정규직 투쟁의 파랑새’ 코스콤비정규지부

코스콤비정규지부 노동자들이 2차 파업 투쟁에 나선 지 6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 투쟁은 ‘제2의 이랜드 사태’라 불리며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해 왔다.

그러나 차별을 고발하며 고용안정을 요구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용역깡패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지난주 사장실 점거 농성을 시도한 코스콤 노동자들에게 퍼부어진 폭력은 대표적인 사례다.

용역깡패들은 해머와 망치, 도끼 등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폭행하며 강제로 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유리문 4개와 나무문 2개가 부서졌고 많은 노동자들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용역깡패들을 비호했다.

이런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노동자들은 초인적으로 투쟁해 왔다. 이것은 사무금융 연맹과 증권노조 소속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를 끌어냈고,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도 끌어냈다. 코스콤 사측은 국정감사장에 서도 지탄받았다.

연대와 지원은 다방면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랜드 노동자 등은 코스콤 노동자들과 함께 1박 2일간 동조 단식 투쟁을 벌였고, IT산업노조는 10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조합원들이 하루 한 끼 결식을 해서 모은 식비를 투쟁 기금으로 전달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코스콤 사장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며 심상정 의원은 재경부가 해결에 나서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연대를 외면하고 있는 코스콤 정규직 노조 지도부의 태도는 패싹하기 짝이 없다.

11월 4일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 총회에서는 “지도부만 아니라 조합원도 구속을 결단하자”, “후회없는 투쟁을 했고 자랑스럽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파업 이탈자도 거의 없다. 여성인 정인열 코스콤비정규지부 부지부장은 코스콤 정문 앞의 ‘비정규직 통곡의 탑’에서 10일 넘게 고공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의 파랑새’를 자부하는 코스콤 비정규직 동지들의 승리를 위한 연대는 지속 · 확대되어야 한다.

전지윤

안병문을 석방하라

11월 1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뉴코아 · 이랜드 투쟁 탄압 중단과 안병문 석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근 정부와 이랜드 사측은 조합원들을 손배가압류와 벌금 등으로 탄압하고 있고, 안병문 동지는 투쟁에 연대하다 구속돼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뉴코아 · 이랜드 노조,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등에서 50여 명이 참가했다.

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은 “안병문 동지는 우리 자식들이 비정규직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 싸운 것 뿐인데, 징역 3년은 말도 안 된다”며 하루 빨리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다함께’ 박설 동지는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음을 선택하도록 만든 노무현이야말로 구속감”이라고 규탄했다.

김지태

정해진 열사가 바란 연대 투쟁이 시작되다

건설 노동자들의 지옥같은 현실을 고발한 정해진 열사의 죽음에 기성 정치권과 언론들은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씨가 말했듯이 “이명박은 하루에도 스무 번 씩 실어 주는 언론이 노동자의 절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살인자인 영진전업 사장 유해성은 “죽음에 대한 책임은 불법 행위를 계속해 온 노조에 있다”고 더러운 입을 놀리고 있다. 이 자는 ‘민주노총 탈퇴’만 요구하며 단협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1백여 건이 넘는 노조의 고소 · 진정을 무시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내몬 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노동자 탄압에 협조한 한국노총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최근 농성장 침탈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해명 요구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마찰과 관련해 대응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해진 열사의 유족은 모든 권한을 민주노총에게 위임했다. 백석근 전국건설노조 위원장은 “열사의 뜻을 우리가 받아서 모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자 부친께서 ‘맞다, 이런 세상 뒤집어져야 한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건설노조 인천지부 전기분과 노동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경인지방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과 촛불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도 “고인의 유언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장례를 치르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책임자 처벌, 유가족 보상, 단협 체결을 요구했다. 11월 6일 원청인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열사 정신 계승 노동자대회’도 열렸다. 이 날 전국에서 모인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강남대로를 점거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말했듯이 “몸에 불을 붙이는 일은 더는 있어서 안 된다.” 따라서 건설 노동자가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투쟁과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정광수 전기분과 위원장이 말했듯이 “정해진 열사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정말 힘듭니다, 이 싸움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손을 내민 것이다.”

박설

‘삼성범죄공화국’의 우두머리

이건희를
구속 수사하라

20년 전 군사정권에 맞서 박종철 죽음의 진실을 알리고 민주항쟁을 촉발했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삼성범죄공화국’과의 싸움에 나섰다. 사제단이 보호하고 있는 삼성의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선언은 삼성이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삼성범죄공화국’을 건설해 왔음을 보여 줬다.

삼성은 김용철 변호사 명의를 도용해 우리은행에 ‘보안 계좌’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50억 원 정도를 관리했다.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는 1천여 개”라고 하니, 비자금은 수조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불법적 비자금 관리는 삼성 출신이 은행장을 해 온 우리은행의 공모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주식의 73퍼센트를 정부가 갖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삼성 비자금을 사실상 묵인했던 것이다.

삼성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치권·법조계·언론·금융계 등 사회 곳곳에 전방위적인 불법 로비를 펼쳤다. 이 건희는 “일본 대기기업은 동경지검장의 애첩까지 관리했다”며 이를 독려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현직 검찰 최고위급 간부들과 고위 법관들에게 명절 등에 정기적으로 5백만~1천만 원씩 줬고, 언론에도 뇌물을 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재경부에는 검찰보다 “0이 하나 더 들어간” 돈을 줬다. 일부 검사는 뇌물을 가져온 김용철 변호사에게 “왜 이제 가져왔느냐” 하고 뻔뻔하게 말했다고 한다.

이렇게 뇌물로 만들어진 ‘삼성 장학생’들은 사회 곳곳에서 삼성과 소수 재벌·부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 왔다. “2003년 인수위 시절부터 최근 한미FTA 추진에 이르기까지 노무현 정부 핵심 정책의 이면에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있다”고 할 정도였다.

노무현 정부는 금산분리를 완화해 재벌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려 해 왔고 이명박도 금산분리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하



“삼성왕국 해체하자” - 11월 4일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에 전면전을 선포한 민주노동당

고 있다. 불법 비자금 조성에 도가 튼 삼성이 은행까지 지배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또, 비싼 치료비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도 못하게 할 ‘병원 영리화’나 의료시장 개방도 삼성생명이 원하는 것이고, 땅투기의 온상이 된 기업도시도 삼성이 제안한 것이다. ‘무노조 신화’도 경찰과 검찰의 지원이 없다면 힘들었을 것이다.

‘떡값’과 삼성장학생들

‘떡값’ 검사, ‘떡값’ 판사, ‘떡값’ 언론인, ‘떡값’ 정치인들은 삼성과 이 건희의 온갖 비리와 부정을 은폐하고 비호하는 구실도 했다.

김용철 변호사가 “당시 법무팀장으로서 에버랜드 사건의 증인이나 증언 모두를 조작했다”고 말하고, 이회창·노무현에게 건넨 “2002년 불법 대선자금이 회사 비자금”이었다고 폭로했는데도,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이라는 검찰은 수사에 나설 기미조차 없다.

조중동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이 문

제를 손바닥만하게 다루며 사실상 은폐하고 있다. 정부의 브리핑룸 통폐합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며 투쟁을 선포했던 것과 완전 판판이다.

사회 곳곳에 퍼진 삼성 장학생들 때문에 김용철 변호사는 “친구들, 메이저 언론사, 시민단체 등에 (삼성의 부정을 공개하겠다고) 얘기해 봤지만 모두의 답변이 ‘불가’였고 절망감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최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보호를 받기 전까지 김 변호사는 삼성의 감시를 피해 컨테이너 박스에서 숨어지냈다고 한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나에게 범죄를 지시했다”며 “돈으로 사람을 매수·회유하는 불법 로비는 모든 삼성 임원의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 그가 공개한 <회장 지시 사항>에 따르면 이 모든 불법과 로비, 노조 탄압의 중심에는 바로 이 건희가 있었다.

삼성 안에서 “헌법으로 간주”된다는 이 ‘지시 사항’에서 이 건희는 현금을 안 받는 사람들은 호텔 할인권이나 비싼 와인으로 매수하라고 꼼꼼히 지시하고 있다.

또, 교수들을 동원해 삼성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참여연대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겨레>는 광고로 압박해 삼성 비판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노조 설립 시도가 있는 분당 플라자는 매각하든지 위탁경영하라는 것도 ‘회장님의 방침’이었다.

따라서 “삼성 문제가 우리 사회의 종양, 암덩어리 같은 것”이라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바르다.

공공의 적

또, 권영길 후보의 지적처럼 기성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모두 “말 한마디 못하고, 삼성이라는 종양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이들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인한 파장이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나서야 의례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떡값’ 정당과 ‘떡값’ 대선 후보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정동영은 이회창의 등장으로 위기감이 커지자 뒤늦게 ‘반부패 연대’를 제안했지만, 이는 “창에 찔려 ‘아아’ 소리를 낸 것”이다. “2002년 불법 대선 자금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받지 않고, “반부패와 미래를 말하는 것은 … 수준 낮은 정치공학일 뿐이다.”(권영길 후보)

따라서 권영길 후보가 부패의 장본인인 정동영과 ‘반부패 회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동영과 일부 언론들이 ‘반부패 회동’을 고리로 ‘후보단일화’를 운운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민주노동당은 이 사건이 밝혀지자 곧바로 노회찬 의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삼성비자금사태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특검제 도입과 수사를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특검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동반될 때 특검을 통해 제대로 밝힐 수 있다” 하고 호소했다.

1백여 명이 참가한 11월 4일 삼성본관 앞 기자회견에서 권영길 후보는 “이 건희 회장이 우리 사회 제1의 공공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삼성왕국 해체와 이 건희 부자 처벌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했다.

부패한 삼성에 맞서 노동자·서민이 들 불처럼 일어날 때에만 “이 건희 왕국이라는 공공의 적”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강동훈

자이툰 파병 연장반대를 위한
반전 집회

일시 : 11월 18일(일) 오후 3시
장소 : 서울 도심 / 주최 : 파병반대국민행동
문의 : 02)795-4337